

“차별금지법 촉구” 시민단체 목소리

광주 인권시민단체 25일 공청회 “평등 향한 한걸음...연내 통과를”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16일 광주지역 인권 시민단체인 ‘인권지가 활짝’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광주지역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교육, 광고 등에서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6월과 8월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주요 골자를 같이 하는 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단계로 넘어간 적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장애 등 사회적으로 차별을 막는 개별법들이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평등개념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차별금지법의 법 기원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처사라는 주장다.

이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평등을 향한 10만 청원인 사그라들지 않고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다.

단체는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으로 잠시 중

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주요행동(피케팅, 시인홍보, 정당방문 등)도 조만간 재개한다. 또 단체는 또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의미와 효과, 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그려낼 소책자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 정당과 의원들에게 국회 개원 전까지 ‘차별금지법안, 법사위에서 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국회 압박을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지난 2006년부터 있었다. 미국·유럽 등의 인권선언과 같이 포괄적인 평등개념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인권단체 ‘활짝’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가 외면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혐오로 인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더이상 종교계 등을 앞세우지 말라”면

서 “‘시민의 요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임을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요구는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지속됐다. 2012년 UN 인권이사회 10개 국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17년에는 제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에서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제안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아동권리위원회, UN 경제·사회·문화권리규약 위원회 등 인권관련 UN기구들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예술위, ‘휴먼북’ 운영
광주시 남구는 17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손잡고 ‘휴먼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휴먼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다. <광주 남구 제공>

건보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순천 SOS어린이마을과 오수지역아동센터(전북 임실군)에 400만원 상당의 태블릿과 노트북을 증정했다. <사진>

정일만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에듀테크의 지원이 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공단도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환경칼럼

이 플라스틱 다 어떻게



정 현 화

많은 사람이 쓰레기 문제로 피로를 느끼면서 ‘재활용 될 거니까’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약 7% 밖에 되지 않는다. 다들 씻고 말려서 배출하느라 물도 쓰고 애도 쓰는데 쓰레기의 대부분은 사실 매립이나 소각되었다는 것이다. 광주는 소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매립 밖에 하지 못하지만 매립지가 포화되는 2030년부터는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후엔 어떻게 할까?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것은 종이보다 90배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며 다이옥신 및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 태우지 않더라도 마이크로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으로 미세하게 변해 뇌나 태반까지도 쌓일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온실가스도 발생하므로 애초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삼지 않는 탈(脫)플라스틱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의 대안으로 근래 인기를 끄는 생분해 플라스틱도 사실은 58도 이상에서만 분해되고 분해과정이 완전 무해하지 않을 뿐더러 내구성도 약해 일회용품에 가깝다.

재활용 조건이 되지 않아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탄소배출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 플라스틱은 PP, HDPE, LDPE, PS, PET, PVC, Other 등으로 나뉜다. 아파트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는 투명 PET병과 그 외 플라스틱, 두 가지로만 나누는데, PET병도 생수병이 아니라면 재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작업으로 선별장에서 추려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공적 일자리를 늘려 선별률을 높이거나 과학기술을 이용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덜 쓰는 방법, 나아가 더 이상 플라스틱의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할 때 최대한 단일물질로 디자인 후 포장하고 복합물질로 된기를 만들 때 그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료별로 쉽게 분리되도록 디자인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 생산자는 마치 담배의 유해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처럼 제품과 포장재질의 재활용 여부를 눈에 잘 띄도록 전면에 표시하고, 소비자는 상세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유등

업체와 대형마트 등에서 채소를 스티로폼 용기에 올려 랩으로 싸는 것과 같은 것도 금지해야 한다.

병 위와 라벨스티커는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거나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표시하고 소비자는 그 제품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무포장제품 생산자나 유통자에게는 탄소제로 보너스나 녹색 마크를 주는 혜택도 고려해 봐야 한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기계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택가에 아파트 재활용분리배출장과 같은 배출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고발하고 친환경 제품은 칭찬하는 사이트도 필요해보인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그보다 5년 이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광주에서 진행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더 많은 광주시민들이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직접 농부가 되어 식량을 생산해야 할 수도, 황량한 지구를 떠나 검증되지 않은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영화 ‘2012’의 장면처럼, 방주에 탑승한 선택받은 생물들을 제외한 생물들은 버림받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나만이 아닌 우리는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환경을 위해 촉발을 들어야 할 때다.

<광주하이커스 활동가>

광주 서구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 개관

20일 개관식...11세 이상 이용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보건소 4층에 서구체력인증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일 개관식을 개최한다.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

해 측정·평가해 운동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로, 현재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측정대상은 만11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구는 체력인증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비 총 10억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착공 후 지난 7월 20일에 준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